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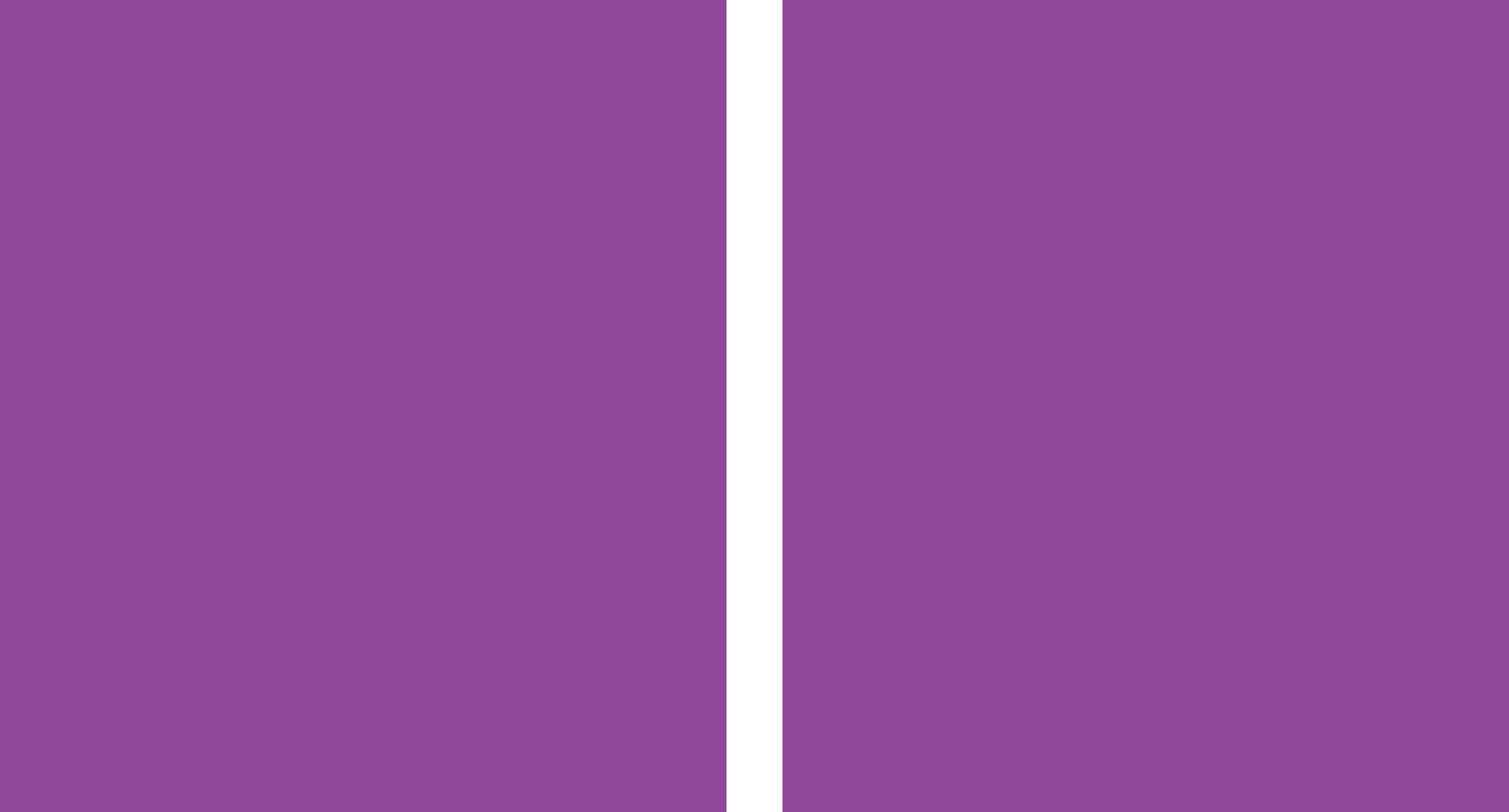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1

1차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2

2차 좌담회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3

3차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 본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좌담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우리는 2020년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미증유의 재난 사태로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항구적 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대면(untact) 산업의 급부상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중단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사회구조 전반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디지털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 온라인 쇼핑이나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재택근무나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온라인개학 등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국가사회와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강화를 위한 디

지탈 대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되살리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하도록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대규모 디지털 투자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해 국가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방향,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함께 특히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좌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좌담회는 ‘포스트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포스트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비롯한 디지털 전환의 총괄적 의미와 방향,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 요인과 전망을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사회 현안 변화 원인과 진단, 그리고 정책과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좌담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뉴노멀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 경제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체계화, 구체화해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3차례 걸친 디지털 포용 좌담회에 참석해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분들과 본 보고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발간사

1차 좌담회_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1.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의 의미	16
2.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정책적 이슈	28
3.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방향	44

2차 좌담회_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1. 디지털 경제 가속화 요인과 전망	60
2. 비즈니스 모델 혁신	70
3.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	89

3차 좌담회_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1.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이슈의 변화	108
2.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변화의 원인과 진단	124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40



1차
좌담회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 (좌장)문용식 원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 (토론)김현곤 원장 · 국회미래연구원



· (토론)우천식 실장 · KDI 글로벌경제실



· (토론)김상협 교수 ·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 (토론)김희수 소장 · KT 경제경영연구소



· (사회)박원재 본부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1차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1.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의 의미
2.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정책적 이슈
3.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방향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1.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의 의미



문용식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의 도약’이라는 큰 주제 하에 소주제를 정해서, 3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좌담회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제언과 함께 큰 시각에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까지 결집해서 국가 디지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고, 둘째는 좌담회 내용을 국민과 오피니언 리더에게 잘 알려져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촉발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좌담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런 효과가 결실을 맺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작년 좌담회의 주제는 ‘디지털 포용’이었는데, 시대적 필요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논의된 덕분에 올해 디지털 포용 정책(‘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 입안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담회의 초점인 디지털 뉴딜 계획에도 디지털 포용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입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뉴노멀 진단, 디지털 전환

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과 정책대안 제시, 한국판 뉴딜 성공의 쟁점과 이슈 분석,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과 뉴노멀 평가, 디지털 대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김희수 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세상이 초기화(Reset)되거나 재가동(Reboot)된다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돌아켜보고, 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는 여파와 현상을 보면 그게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40년대 유럽에서는 흑사병(페스트)의 대유행으로 인구 열 명 중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함께 임금도 오르면서 중세시대를 유지하던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사회 시스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데 흑사병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때도 역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사스(SARS)로 인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이후에 쿠팡이 기회를 잡고 급성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전염병이나 전쟁, 재난이 기존 사회 시스템이나 질서를 흔들면서 진행되던 기술이나 흐름을 더 빠르게 부각시키는 현상을 과거에 경험했는데, 이번 코로나19도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염병이 가진 전파력이 강력한데다, 20세기 중반 2차 대전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콘텍스트 속에서 전염병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전염병의 충격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았으면 물리적 접촉 활동이 줄어들고 위축되어 서서히 변화하겠지만, 지금은 디지털화로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비대면 기술이 상당히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대면 부분에 큰 충격이 오면서 쉽게 디지털화, 비대면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대면 쪽이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행, 관광, 호텔업은 수요가 99% 감소했는데 영상 회의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IC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체계가 우수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를 산업화하고,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주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OECD 중에서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가지고 온 우리나라가 생산성이나 잠재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ICT를 기반으로 전산업 부문에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디지털의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해 계층 간 불평등이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역기능도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국민이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에 익숙해지

기 시작하고, 노년층까지도 온라인 banking이나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용식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시스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에 입각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화, 비대면이 가속화되면서 IT 기반의 새로운 기회나 생산성 향상, 각종 규제 완화 해결 등의 기회가 만들어져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 · 후(Before Corona(BC), After Corona(AC))를 말씀하셨는데요, AC가 가능할까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코로나19 발생을 염두에 두고 AC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협

저도 사실 포스트라는 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19가 다 지나갔다는 느낌인데 변종 가능성이나 새로운 형태의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게이츠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한 것이 팬데믹과 기후변화인데 우리가 그것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죠.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상이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교란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서 지식을 나누는 공간인데 이미 물리적 의미의 학교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비대면 교육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기술이나 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면 편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겠지만 온·오프라인이 병존하는 형태가 되면서, 교육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야말로 디지털 격차나 소외(Divide)가 커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용식

디지털 격차나 소외 이슈는 이후에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 어떻게 더 효과를 볼 것인지 방법을 찾는 측면에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어서 디지털 격차 문제도 심도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회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락다운되면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수출만이 살길인 나라였는데,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야 기회와 위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식

다른 나라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지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경제적 피해를 덜 입었냐면,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서 경제활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으로 성공적으로 버틴 거죠. 다른 나라는 방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동의하다시피 앞으로 V자 형태의 성장은 불가능하고,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현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코로나19 추동력(Impetus)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격차나 소외 문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일부 직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격차보다 더 심각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상충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자리가 축소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니까요.

고용불안이 안고 있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대 공공분야인 교육, 의료, 국방, 행정에 더해 개인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어디도 고용이 버틸만한 분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등을 통해 이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능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뉴딜의 승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현곤

BC와 AC를 말씀하셨는데, 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개개인이 생각을 원점에서 돌이켜 보고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테면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지만 규제나 제도의 문제, 사람들의 관행, 기득권층의 저항 등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사회를 바꾸거나 나아갈 방향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미래상이나 사회 변화상,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지향점을 정립하고 거기에 디지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지금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용식

상당히 낙관론이시군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원격교육이나 영상의회의 등은 어려웠을 텐데 사회질서가 급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질서와 뉴노멀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김상협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해서 미래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기존 기득권 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교수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의료 분야는 어떨까요, 불가피하게 전화 모니터링을 임시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원격의료나 진료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희수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니 국민의 수요를 봤을 때 조금씩 진전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3차 기관인 대학병원은 일부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는 형태로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진료는 대면으로 하고 2차 진료는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하는 타협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진전은 안 되고 진통만 거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곤

저는 원격의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는 비대면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용이 된 거죠. 의료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A 아니면 B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의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원격의료를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고,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어 양질의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져서 지금 의료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가마다 의료 쪽에서 다른 대응을 할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넓은 곳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는 국가를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협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 ABCD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이러스 포착을 위한 인공지능(AI), 바이오로지(Biology), 깨끗한 에너지나 모빌리티 등의 청정에너지(Clean Technology), 디지털(Digital)인데 이 네 가지 기술이 서로 결합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추동력과 코로나19 격차 두 가지가 여실히 나타날 분야가 의료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병원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격의료도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이런 기술 등을 따라잡지 못하고 소외되는 병원이나 의료인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의료나 의료 신산업이 대두될 때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낙오되거나 힘든 쪽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2.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정책적 이슈



문용식

코로나19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중요성은 이 정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한국형 뉴딜인데, 뉴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과 취지에 맞춰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정책적 이슈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이신 김현곤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곤

지금은 급한 불도 끄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코로나19가 준 기회도 살려야 하는 긴박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위기가 가져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은 있었지만, 두 가지를 모두 지향하는 것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코로나19 추동력으로 사회 전체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안전망으로 불평등 격차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미래를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정책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추진 주체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심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책과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진 주체를 더 확대해서 어떻게 효과를 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세 개의 추진 주체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부, 두 번째 국민, 그리고 국민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자체가 주도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와 협업하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확실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격차 또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디지털 전환의 수혜 대상이지만, 기업경영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듯이 국민 각자가 똑똑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국민의 가능성과 저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주체가 협력하면 정말로 효과적인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용식

코로나19 추동력으로 코로나19가 준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충격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정리하시면서 지향점을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전체적인 이슈는 우천식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천식

4차 산업혁명이나 지식정보사회의 연장선으로 가다가 ICBM(IoT, Cloud Computing, Bigdata, Mobile)이나 인공지능(AI)이 급격하게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디지털 전환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함은 각기 다르겠지만, 과거 정보화 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술에 따른 전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추동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의 위험도가 높아져 비대면이 확대되고, 사람보다 로봇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해지면서 기업은 당장 사람을 고용하면 오히려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지털 전환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디지털 대전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람의 가치, 즉 신체적 접촉 비용이 높아지면서 AI라는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만일 피하겠다면 고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실업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취업이나 실업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확보 둘 다 중요하데 고용이 위태롭다는 딜레마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AI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고용 문제가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회와 위험 요인일 것이고, 이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사회 단위에서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고용안정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계속 저하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디지털 혁명이나 전환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라는 느슨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정부 투자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상협

저는 2000년은 1999년에서 해가 바뀐 것일 뿐이지 21세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보면서 새로운 세기의 현상이라고 느꼈고, 대전환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세돌과 알파고 대전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I가 가져오는 세상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직업이나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지만 AI가 학습을 거듭해 재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인간의 지적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죠.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업으로 귀결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기본소득 문제도 거론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은 촉진하되, 어떤 세상이 와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다



가을 변화로 노동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을 논의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반드시 직업전환이나 일자리 등 사회경제 전체를 보는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희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대안이 없으니 기본소득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학교 교육과 직장인의 재교육을 통해 직업과 역량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에 정책과 투자가 집중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정책에 반영되기

는 하는데 항상 부족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돕거나 보완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AI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분야입니다. AI가 굉장히 많은 지식 콘텐츠를 세분화하고 수준을 나눠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도와주면서 가르치는 개인 맞춤형 학습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걸리는 대학교육을 1년이면 마칠 수 있다고 하는데, 4배 정도의 빠른 생산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AI를 기반으로 학교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Mass Education)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재교육을 하면 완전히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을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시키거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디지털과 그린에 주가 되고 휴먼 뉴딜은 고용안정 뉴딜로 후순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하는 뉴딜이라면 휴먼 뉴딜이 주요 정책이 돼야 하고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휴먼 뉴딜에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격차 해소, 국가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직업전환 교육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습 등을 포함한다면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을 디지털 기술로 추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나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사람에게 축적되고, 사람에게 축적되면 소비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미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분들의 컨센서스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당연히 가속화 해야 하는데, 고용불안이나 실업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마련이나 재교육, 전면적인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과 고용불안, 직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과연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인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협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보고서를 대량 실업 보고서라고도 부르더군요. 하지만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개인의 기본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경로를 찾아내는 등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용식

다른 측면에서 일부러 논쟁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서는 AI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다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도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경험으로 봐도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애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일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했듯 AI가 확장된 지능으로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고 확장시켜서 단순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고 더욱 창의적이고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전면적인 일자리 축소를 가져온다고 예단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요. 없어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올려줘야 할지, 직업전환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되, 이것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휴먼 뉴딜을 가장 우선적인 최상의 과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 전략과제로 설정해서 집중하자는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식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관련해 고용 충격을 예측한 연구나 분석은 많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없어질 것이라고도 하고, 일자리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 조금은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보완해 주기도 하고,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충격은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외면하지 말고 일자리나 고용 충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AI 기술이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미국이 앞서 경험을 하고 있고, 고용 문제 등도 먼저 고민을 하고 있으니 미국의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맞게 구체적인 분석 모형을 만들고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문용식

한 가지 요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000만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출발점이 실습이나 교육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환경이 확대되면 대면 교육은 어렵고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질 텐데요. 김희수 소장님 말씀 중에 AI 대중교육도 전면화해야 하는데 대중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툴이 개발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귀가 번쩍 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희수

원리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시에게 입력시키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개인별 학습 수준을 측정하는 기능을 개발해서 잘 매칭시키거나, 필요한 소양을 식별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화된 진단과 콘텐츠를 처방하는 AI 기반 학습 도구를 미국의 벤처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아리조나 대학에서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툴은 수학처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적합할 것 같고, STE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육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나 개념 등을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콘텐츠로 제작해서 설명하면 몰입감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가능해서 교육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용 툴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교육의 산업화죠.



김상협

초중고,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틀을 가진 집합교육의 성격이어서 학생들의 격차도 벌어지고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려웠 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 아리 조나의 실험이죠.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준이나 잠재력을 토 대로 진로를 피드백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I 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튜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문용식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대전환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압축시키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 계획 등을 좀 앞당겨 실행하는 것이고, 뉴딜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방향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본연의 의미, 즉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등의 새로운 협약으로 질서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뉴딜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판 뉴딜을 그런 부분으로까지 확장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식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부상했지만, 그동안 많은 분이 주장했던 부분이라서 해야 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AI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장 원천적인 기술 개발 분야는 미·중의 경쟁이고, 우리는 AI 원천기술 R&D보다는 상업적으로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쪽에 강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기술 수용도가 높다는 두 가지의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었죠. 인구 5천만 명이면 내수시장 크기도 괜찮고요.

원래 AI 기술이 미국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응용을 잘합니다. 학습용 툴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강점을 살리



기 위해서는 너무 기술 요소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인 분야에서 수요 중심의 관리 접근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나 기술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술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걸 뉴딜 중에 휴먼 뉴딜에 해당이 되겠죠.

또, 뉴딜 사업 중에 사회기반시설(SOC) 지능화도 포함되었는데요, 이번에 하드웨어인 SOC 개념에서 휴먼 SOC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과 학습 공간을 디지털 기반으로 실제로 구축해 주거나, 또 코로나19가 더 진행되면 고밀집 지역은 취약하고, 전원적이고 수평적

이고 분산적인 곳이 더 건강한 지역이니 새로운 공간 배치나 공간 활용 전략을 추진해 볼 수도 있겠죠.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분산해서 SOC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병원이나 학교 모델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SOC는 큰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나 교육 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하면 수도권의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거 형태나 공간 형태가 뭔지 고민해서 휴먼이나 스마트 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용식

SOC 지능화 문제로 확장해서 휴먼 SOC, 공간 배치 변화까지 진행시켜서 생각하시는군요. 상당히 새로운 주제 같습니다.



김현곤

한국판 뉴딜이 단순히 기존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뉴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것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만 나열해서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 아니라, 뉴딜의 최종적인 목표를 재정립하고 목적을 명확히 해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지금 제시되는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김희수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특별 자문관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는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에서는 핵심 목표와 임무를 전문가와 정부가 하향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하향식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정책 과제이면서 사회의 큰 현안을 해결할 목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단계적인 세부 목표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디자인해서 풀면 다양한 산업 간, 섹터 간 융합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때 이런 방법론을 도입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렵기도 하고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뉴딜이 나온 배경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표현으

로 하면 준전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각합니다. 특히, 고용과 실업문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요, 이걸 빨리 수습하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3.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방향



문용식

한국판 뉴딜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면서,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청사진도 보여주고, 그린 전환과 휴먼 뉴딜까지 고려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딜의 세부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계 방향이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김상협 교수님께 그린 뉴딜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협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은 디지털화와 기후변화의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탄소화((Decarbonization)입니다. 탈탄소화가 그린 뉴딜의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유럽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가져간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없이는 그린 뉴딜을 왜 추진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정책은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다음 정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의 목적이나 타깃 설정,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린 뉴딜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됩니다. 에너지 저탄소화(석탄 중심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 두 번째는 새로운 교통체계로의 변환(내연기관 교통이 청정한 모빌리티로 전환), 세 번째는 제레미 레프킨이 강조한 에너지와 디지털의 결합입니다. 에너지 인터넷이나 스마트그리드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간 연동에 필수인 5G 무선망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사물과 그리드가 결합하는 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전력망이 전력을 주고받는 V2G(Vehicle to Grid)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에너지 운반체가 되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VPP(Virtual Power Plant)라는 것도 있습니다. 발전기 없는 발전회사로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인데, 작은 가상 발전소를 디지털 기술로 통합해 피크 타임에 잘 활용하면 거대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AI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 연계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는 디지털과 그린 양쪽에서 함께 오는데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우천식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에 대응해 구제(Relief), 회생(Recovery), 개혁(Reform)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조성되도록 국가 사회적인 대응을 폭넓게 해서 경제가 충격에서 회복될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것이죠.

한국판 뉴딜도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 차제에 이해관계를 극복하면서라도 규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수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이 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지,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원하는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해서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사회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해야 한국판 뉴딜 추진이 의미가 있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용식

김상협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그린 뉴딜의 방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이 확정되고 구체화 되려면 하나하나의 과제가 정책화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정책 수단이 확실해야 하고, 투입과 산출이 예상 가능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김상협

코로나19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원래 국제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와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LEDs)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넷제로(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달성이 어렵다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해야겠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규범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2030년, 2050년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서 건물·교통·산업·에너지·농업 등 영역 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어떻게 감축하고 어떤 성장엔진을 키울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고, 비대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줄어들 것입니다. 에너지와 디지털을 결합하는 것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것을 함께 논의하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같이 논의하면 그림이 보이는 영역들이거든요. 일단 목표가 있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식

에너지와 디지털의 결합을 강조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그린 에너지와 그린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의 힘이 백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충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김희수

저는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읽고 설득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그 책에서 이야기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경로에 있기도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하나의 트랙이구요. 그런데 당장 뉴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닥친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고용도 창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사회 인프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은 탄소제로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바꾸면서 상당히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물리적인 인프라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그린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잘 결합해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면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노동력이 투입돼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겠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틈새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협

일자리나 고용 충격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매우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용 창출 능력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수준의 예측이고 연구 차원에서 잘 백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는지 답을 해야 하거든요.



우천식

고용과 관련해서는 잡셰어링(Job Sharing)이나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소셜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많았는데요. 과거 200년 동안 도시화, 산업화, 3차 산업화까지 순차적 왔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도 줄이고 급여도 덜 받으면서 나머지는 시골이나 전혀 다른 공간에서 대안적인 삶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문명을 접하지 못하는 낙후된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나 디지털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꼭 도시가 아니어도 접근성이 뛰어나서 원격근무나 교육, 의료 등이 가능하고, 저렴한 생활비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간개발이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지방까지 폭넓은 공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안전망이나 생활망, 근로망 등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도 도시로 돌아가지 않아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분산된 전원 지역에 새로운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김상협

그런 뉴딜이 휴먼 뉴딜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이 부상하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심기나 숲 가꾸기 등이 재

조명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는 자연을 경제에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도시가 아닌 건강한 전원 속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배치를 하는 것도 그린 뉴딜이 휴먼 뉴딜을 뒷받침하는 형태 같기도 합니다. 원래 기술개발의 목적은 인간을 고된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을 잘 설계해 나가면 우리는 노동이나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인간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그런 목적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면 좋겠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문용식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계성에 국한하지 마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 말도 앞서 논의에서 어폐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이 성공하려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시급한 위기 극복과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회가 왔다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장벽을 없애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수요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자원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산업도 생기고 고용도 창출되죠.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논의와 타협과 정치적 영향, 비전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소통 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협심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장벽을 없애주고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곤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절대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고 했습니다. 지금이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네거티브한 것인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기인지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미래학자로서 처음 저술한 책이 ‘미래충격(Future Shock)’입니다. 이 책 내용과 코로나19를 연결해 보면, 코로나19는 위기도 맞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코로나19 충격(Corona19 Shock)’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를 좋은 의미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천식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 가지 좋은 선물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글로벌하게 국격을 올린 것인데 이견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진시민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견 굉장한 자기 발견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가는데도 우리는 깊은 가치의 전환과 재발견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의 삶과 행복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 경쟁력 제고나 경제적인 강국 지향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혼란한 상황에서 방역을 잘한 덕분에 국가의 프라이드도 생겼고, 정부도 잘 대응했구요. 코로나19가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텐데 좀 더 국격, 사회적 자본

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방역 등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협

좋은 위기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면 인간이 과도하게 자연의 생태계를 침범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전염병도 문제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전에 없던 질병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사무총장의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깨끗한 녹색 전환(Clean & Green Transition)이 궁극적인 답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문용식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보다 풍성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쉽게 극복이 안 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2의 확산이 오고 팬데믹이 오더라도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리부터 붕괴가 되더군요. 사회적 약자부터 심각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회복탄력성(Resilience)인 것 같습니다. 의료, 교육, 중소기업, 공공 등 모든 취약 부분의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대책도 그렇고, 뉴딜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나 비대면 산업이 확대될수록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시스템을 잘 갖춰야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잘 설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위기(Good Crisis)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었던 것처럼, 디지털로 무장한 잘 준비된 국가로서 이 위기를 좋은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집중하기보다 과감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이 지지부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빈틈없이 100% 성공하는 계획이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급한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가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추가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과감하고 유연한, 그리고 일관된 실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로 진행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좌담회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 (좌장) 박희준 교수 · 연세대학교



· (토론) 강영재 대표 ·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 (토론) 박정수 본부장 · 산업연구원



· (토론) 이은영 이사 · PwC 리서치센터



· (토론) 최공필 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 (사회) 박원재 본부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2차 좌담회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1. 디지털 경제 가속화 요인과 전망
2. 비즈니스 모델 혁신
3.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1. 디지털 경제 가속화 요인과 전망



박희준

이번 시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두 번째 좌담회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예를 들면, 대면 소통을 회피하기 위한 언택트 산업이 최근에는 안전을 위한 언택트 산업으로 시장의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제품 서비스 향상도 중요 하지만, 어떤 사업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시장에 접근하는 사업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높아지는 불확실성을 기업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요인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본부장님께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요인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수

제가 지난 15년간 서비스 산업을 연구해서 이제 별로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 보아온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 로드맵 연구’로 설정해서 진행했어요. 갑자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제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주장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과 경험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도가 없으면 시장에 못 들어가고 규제가 있어도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규제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올해 비대면 서비스에서는 자금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과 기술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이라면 고령화, 여성 경제참여가 가장 크고 그다음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고령화나 여성 경제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로 요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령화는 사회복지, 의료시스템일 것이고 여성 경제참여는 양육, 사회복지, 편리함과 가사와 같은 분야일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소규모, 개인화된 서비스가 수요 측면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폰이 현재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통과 금융 부분이 가장 선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를 이루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단계로 기존의 서비스를 ‘어떻게 고급화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고도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 등장했고,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시장에서 주목 받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변화와 동인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준

두 가지를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수요도 변화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요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영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재

현장에서 보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 수단으로서 기술에 관한 데이터, AI, 스마트, 디지털 등을 친환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SOC, 에너지 등 그동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향이

미미했던 부분까지 포섭해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변화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생산력을 높여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정책 분야와 기술에 대해 정부가 지정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 하나에도 다양한 분야의 요소 기술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전에 목표를 정하기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승자가 나오거나 다양한 기술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도 딥러닝 등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고 활용될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최강자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핵심은 곱셈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도입됐을 때 +1, +10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시너지효과를 이뤄내서 곱셈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10배 이상의 생산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인재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부분에서는 B2C와는 다르게

B2B에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데이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먼저 러닝하는 사람을 후발주자가 쫓아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성공한 기술이 경제 각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울러 재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D입니다. 지금까지는 팔로우업 차원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됐지요. 그래서 R&D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기술이란 문제 해결의 방법론과 문제 해결을 통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R&D도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푸는 공학적(엔지니어링) 해법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노하우인 기술(테크놀로지)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의미 있는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연구소나 기업 내의 연구조직에서만 하는 연구가 아닌 현장에서 적용하고,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 승자가 나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섹터’가 중요합니다. 학교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적용하여 성공했듯이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섹터’에서 R&D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술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솔루션’으로서의 기술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대표님의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선보여지지만 대부분 기술 중심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존하는 기술로 채워지지 않는 사용자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나? 사용자는 소비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지속해서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전처럼 구매해서 소유하고 사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반해 공급자의 고민은 소비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끊임 없이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비용을 억제하면서도 고객별 맞춤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연계되면 사용자별 맞춤식 제품과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영재

최근에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욕구를 디지털 기술이 과거 어떤 기술보다 잘 풀어나가고 이에 따라 가치가 커지고 부도 새롭게 창출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렇게 발생한 부의 분배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새로운 부를 창출하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고르게 확산시킬 것이냐를 고민해 본다면 실질적인 솔루션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은영

요즘 수요자의 요구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M&A 시장에서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 과거와는 무척 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돈이 되는 화장품 회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플랫폼,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을 찾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6개월 만에 바뀐 것입니다. 대부분 콘텐츠나 플랫폼과 같은 4차산업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었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행해지는 연구는 변화의 대응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박정수 본부장님은 중장기 로드맵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항에 맞춰서 끊임없이 시험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은영

강영재 대표님의 스타트업 이야기는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M&A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다루는 업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에 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청이나 관계 부처에서 그런 기업을 찾으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입니다. 자율주행차 분야 기업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분명합니다. 정부는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천만 원씩 주는 건 효율성이 없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딱 하나, 지속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타트업이 정착하는 시기가 빨리 오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준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직접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을 앞에 세워놓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벤처를 통한 위험관리라는 수단은 점점 주목받을 것 같아요.



강영재

외국은 아시다시피 큰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에서는 살 만한 기업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2~3년 사이에 시각이 바뀌면서 지금은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M&A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대단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도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경쟁자가 나올지 모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버는 스타트업이 일종의 보호 장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2.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박희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들은 핵심자원, 활동, 파트너십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위험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산을 확보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부분에서 금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공필 연구위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공필

금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타이트한 규제 하에서도 금융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빠르지만,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더딥니다. 취지도 좋고 국회에서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질타도 하지만 아직은 현실에서 구현되기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최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민간에서 올라온 의제가 전통적 관료사회의 관행 때문에 수용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관행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상당한 부분의 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리소스의 90% 이상이 관행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관리를 할 때 나설 수 있게 정부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양극화라든지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재정특위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리소스에 대해 세금으로 부담을 돌릴 가능성에 누가 제동을 걸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걸 금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야 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위기 이후에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금리의 기본 기능이 위험 차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인데, 금리의 기반 구조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로 최저 금리를 유지하는 데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될 수 없죠.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행의 잘못 때문에 금융의 긍정적인고 핵심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암중모색의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가시적으로 몇조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 돌아가는 부분은 정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민간 측에서 특히 시장 중심으로 뭔가 작동되는 모습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조차 안 돼 있고, 우리 스스로 민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뢰 토대의 다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방된 자세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희준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접어들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기술창업, 중국에는 취업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연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재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재

금융과 관련해서 최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D)정부가 소위 벤처에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체화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만든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한 번 투자된 돈과 시간은 다른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보다는 훨씬 더 큰 나비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최근 국민연금이나 큰 펀드에서 투자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조금 더 정부가 마중물을 낸다면 훨씬 큰돈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위험이 크지만, 이걸 모아 풀링(Cash Pooling)을 하고 펀드오브펀드(FOF)를 한다면 결국 성공확률을 높িয়ে 될 것입

니다. 또한 수익률도 5% 이상 IR(Investor Relations)이 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지금 디지털 경제 가속화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분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은영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영

2월 초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막 시작됐을 때, 글로벌 PwC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시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경우에도 와이어드링 하네스(Wiring Harness)를 못 받아서 생산을 못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때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말이 부각되었어요. 이미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고 해서 통용된 말인데, 글로벌 통용어가 된 겁니다.

당시 리쇼어링을 통해서 우리 제조업도 다시 강해지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면서 글로벌 팬데믹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자국에 제조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필요물자에 대한 제조업의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국이 느낀 겁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국 안의 제조업을 기반 기술로 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요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자동차나 핸드폰 등 상품 구매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연결선이 끊기게 된 거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기업은 스마트워크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무인화, 자동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 디지털은 이미 트렌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온라인화가 됐습니다. 과거 백화점에서는 40~60대 아줌마들이 유일한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그 아줌마들이 다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3조나 되는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매출의 5%만 옮겨도 3조가 되는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그리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PC, 모바일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했고 줌(ZOOM)이라는 회사도 부각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받아들이는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자리 잡으려면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의 변화에 우리는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의 온라인화는 대세이고 스마트워크는 필수 조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화와 자동화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교육 등 고민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자본시장입니다. 시가총액 높은 회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KT, SKT에서 지금은 NHN, 카카오가 등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등 10위안에 들어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최소 5년 이상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준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게 4년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성공사례로 소개했던 글로벌 망 관리 업체인 '리엔 핑'은 올해 초에 망했습니다.

세계에 공장 하나 가지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서 한해 20억 달러를 생산한다고 했던 '리엔 핑'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민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생산과 물류의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수

산업은 크게 '제조업 기반 성장'과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주력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으로 돌아가는 성장인데 코로나19로 인해 GVC(Global Value Chain)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플랫폼을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았지만 역시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제품과 요소들이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상품 외에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어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주고 스타일 해주는 형태였지, 쪼개서 세밀하게 비즈니스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소비자의 수요나 기술의 형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어요.



박희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소한의 단위 모듈로 다 쪼개서, 사용자들이 직접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고 조합해 사용하는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예요. 보험업도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 보험상품 보면 본인들이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말씀처럼 현대차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정수

앞으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하듯이 서비스도 제조업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결합과 서비스업에서 생각하는 결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우위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비스 분야 일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던 초기에는 주로 기술과 하드웨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결론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서비스는 기술과 제조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상당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어떤 형태의 서비스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지에 대한 많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영재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실질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싼 임금 때문에 상당 부분을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IT 산업이 있어서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제조업 기반의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도입할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오토파일럿’, ‘코파일럿’ 개념입니다. 먼저 ‘오토파일럿’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코파일럿’은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코파일럿’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람의 육체적 노력이 필요 없는 부분은 ‘오토파일럿’이 하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소위 협업적 로봇인 ‘코봇’을 활용한다면 생산성도 늘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죠. 벤츠에서 ‘코봇’을 늘렸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봇’을 활용한다면 고령인 사람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봇’ 상황에서 쌓이는 노하우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러닝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선순환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더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돈과 기술과 사람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IT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에요. 이런 장점과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디지털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제조업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열리고 그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금융서비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변화가 가장 더딘

부분 중의 하나가 금융서비스 산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요 은행에 가보면 은행끼리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플랫폼이 구동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변화를 다 담아낼 공간도 없지요. 규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공필

모든 변화의 화두는 연결성입니다. 5G 세상은 서버-클라이언트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다면 시장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소비자, 공급자, 개발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미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몇조를 푼다’ 이렇게 재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시민들이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시장의 니즈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시장 밀착형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스타트업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토양이 있어야 하는 데 매우 열악합니다.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진짜 심각합니다.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과연 적법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

어요. 그것을 판단해줄 분들도 몰라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개방하고 협업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규제가 다 막고 있어요. 기술로 인해 멋진 세상을 그릴 수는 있지만, 금융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적법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충돌하고 책임소재와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추세와 눈높이를 맞췄으면 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일에만 골몰해서 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헛도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연결이 만들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부동산, 주식, 채권, 저작권 등이 디지털 토양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이 만드는 기회는 디지털 토양에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희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사 구조, 신뢰 구조, 이것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던 것이 분산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금감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단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공필

참 흥분되는 주제예요. 블록체인은 이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들에 대한 불만으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주도하던 민간에서는 세력이 약해져 버렸고 오히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미 중국은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디지털이 우리에게 기회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DNA 배열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가의 권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따로 만들겠다는 절충적 대안이 나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간 주도의 균형 잡힌 세계로 가려면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인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디지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덜 아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희준

디지털 기술이 민간 주도가 아닐 때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우리가 만든 여러 제도와 틀, 입법기관,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규제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회의 틀 자체가 지금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요.

블록체인을 여쭙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면 정치체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 변화의 점진적인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군요.



최공필

초기에는 민간 주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은 거의 독점적입니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국가가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제가 작년부터 금융을 연구해본 결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부분을 금융 플랫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을 포함한 이런 서

비스는 앞으로 5년 후에는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은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공필 박사님은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빚을 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산관리와 교통서비스, 서비스 유통 등 경제



활동의 전반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이는 기본소득의 문제 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누군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금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중장기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는 중장기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정부와 일을 해보면 너무 단기간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비대면 서비스도 갑자기 나타났고, 이와 같은 정책이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2~3달 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욱 긴 흐름과 호흡으로 산업발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현상도 고민하고, 인력양성도 고민하고, R&D 지원도 고민해야 합니다. 한 4~5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고민하면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바람직한데, 갑자기 이슈가 뜨면 당장 이걸 해결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 천억씩, 몇 십조씩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박희준

고민을 오래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통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 여쭙본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시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여론과 수요가 많아지는 시대에 여전히 정당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미국은 이미 사안별로 배심

원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저는 정당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안별로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강영재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나온 철학적인 배경은 좌장님이 말씀하신 이상적 이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빅브러더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나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하이재킹을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본래의 철학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99% 정도로 실현이 됩니다. 다만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와 게임이론, 인센티브 시스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어떻게 분산하여 실현 가능한지를 계속 실험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산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은 실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



박희준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최공필

디지털 가속화는 위험할 수 있어요. 스티븐 스피버그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가상현실 게임이 지배하는 미래사회를 묘사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가속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현실에서 만족하는 사회로 갈 수 있어서 이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은영

지금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해요. 그들의 생활방식에 이미 디지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들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박희준

아무래도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해 세대마다 느끼는 감정과 지지 여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변화를 쫓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박원재

최근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발표를 했는데 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린 뉴딜’과 ‘사회안전망’이 순차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구성이지만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전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극복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비즈니스 모델로 초점을 맞춰 보면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과 민간 영역에서 많은 인풋을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전에는 이해관계자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많아졌습니다. 노동, 사회, 복지, 교육, 의료 분야에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하고 갈등 관리를 할 것인가가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다양한 주체가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박희준

갈등 관리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강영재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영재

비즈니스 모델 규제 혁신에 대해 원론적 접근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100대 유니콘 기업 모델을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면 70%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제가 많았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규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디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사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 비즈니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예측해 봐야 합니다. 규제는 그 당시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수준, 또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도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적용한 자동차 운수법은 60~70년대에 가능했던 운수 관련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운수와 관련된 모니터링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에게 독점권을 주고 서비스 수준을 맞추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죠. 기술이 변하면 당연히 규제도 변화해야 합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라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규제하에서 기득권 입장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꾸는 것은 말은 좋지만 힘듭니다. 나라의 법체계를 다 바꿔야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없고 유인책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방법은 첫 번째는 지금처럼 샌드박스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법으로 정해놓고 사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하는 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자동차 운수교통법 규제의 상당 부분을 기술로 풀 수 있어요. 개념적이고 원칙적인 규제는 사후적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득권 문제가 있어요. ‘타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출정책에서 수입을 반대하는 경우 아주 원론적으로 풀었어요.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는 경우, 이득을 위해 수출하고 손해 보는 입장을 위해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쪽에서 끌어다 저쪽으로 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솔루션이라 생각해요. 지금 안고 있는 ‘타다 솔루션’도 그런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택시 영업권을 구입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결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택시업과 신규 모빌리티업에 대한 논의는 5~6년 이후에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택시기사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택시업에서 모빌리티로 옮겨도 수익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택시업의 면허권 가치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분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해요. 언젠가 도래할 자율주행차 시대, 현재 기사분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현실의 규제에 갇혀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영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 미리 개념적이고 다양한 방식이 적용 가능한 범주를 만들어서 범주 내에서는 스타트업이나 미래지향적 조합장이 규제로부터 예속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이런 생각을 못하게 돼요. 생각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규정을 정의해 두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업계가 들어와야 해요. 예를 들면 ‘우버’가 그랬습니다. ‘우버’는 기술을 믿고 독단적으로 갔지만, 각 나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어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와 공무원들이 배웠어요. 같이 고민해서 솔루션을 찾았던 것이죠. 그 이후 나온 2세대 모빌리티 사업인 킥보드는 초기부터 협의했어요. 공무원이 업체로 가고 업체에 있던 분이 공무원으로 가면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앞으로 디지털 전환도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단순 규제가 아닌 기술과 비즈니스 관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입법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사안에 대해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LA에서는 킥보드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가지고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요. 이렇게 공공정책과 민간영역의 파이를 키웁니다. 파이가 커지면 경쟁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기술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반드시 ‘일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규제는 필요해서 만들지만, 일정 기간을 정한 후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박희준

오늘 본부장님이 한국판 뉴딜을 화두로 던지셨고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
니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브레인으로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제공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고 좋긴 하지만 과연 기대한 만큼의 성과
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재 본부장님께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
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재

규제 해소 문제는 아무리 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AI)을 보
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문의 제도와 규제가 무력화되거나 크게 변화시켜
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분야별, 기술별로 어떻
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지 많은 전문가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입법화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정보화가 지능정보화로 바뀌면서 방향과 내용 자체가 변화할 것입

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
어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원용해서 어떤 규제를 시행할 때 먼저 해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후에 시행 여부를 정하자는 것도 있습
니다. 거꾸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고, 거기에 맞추어 제도로 변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제
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나 플랫
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타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대구는 택시
인프라가 좋아요. 재작년 택시 요금을 인상하면서 자율적으로 택시 대수를 줄였
어요. 유휴 차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조지아의 대중교통도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재밌는 것은 택시 연합체의 앱이 있어요. 카카오앱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들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혁신의 대상이 된다고 오
해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하
고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올라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영재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만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
록 여유를 준다면 그들도 혁신의 주체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정수

연구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규제 때문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행을 해봐야 무슨 규제가 있는지 나타나요. 규제일몰제도 광범위한 이슈가 걸려 있어요. 서비스업이 가진 태생적 한계는 모든 관련법이 규제예요.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법도 모두 규제예요.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어요. 의료 비즈니스가 돈과 역이면 보험법에서 걸려요. 원격의료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주체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미국은 개인과 기업체도 지불해요. 실제로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 의료 규제는 보통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실험 자체나 솔루션을 모색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저는 요즘 사회적 갈등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규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규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많아요. 소비자가 있고, 기존 진입자가 있고 새롭게 들어오려는 진입자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신규 진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 하겠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기존 일자리에 있는 종사자예요.

이 기존 시장은 몇 년이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5년이 아니라 빠르면 2~3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조금 오래가면 10년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시장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기존 종사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박희준

동의해요. 택시 기사분들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논의에서는 소비자와 사용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수

그래서 모든 논의에서 핵심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배제되었어요. 원격진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배제하고 논의를 해요.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영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생각할 때, 미국 정부가 2017년도에 했던 자율주행차 추진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적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매년 삼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그중 95%가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면 그만큼 생명의 희생이 사라진다는 뜻이 돼요. 둘째, 교통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의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율주행차가 추구하는 중요성이자 역할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처음부터 자율주행차 도입이 된다, 안된다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와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고 공통부분이 정해지면 훨씬 생산적 논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논의할 때 사회 분야별로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면 기존의 규제로부터 발목 잡히지 않으면서 훨씬 생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에요. 핵심은 지속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1~2년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수차례,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한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조금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도 참여해야 합니다.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변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투자될 돈은 투자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공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신뢰의 토대가 많이 분열됐어요. 대화하기 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편을 갈라버리면 정상적으로 대화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해요. 글로벌 차원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공론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토대로 하는 정책 설계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공지능

능도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희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IT 통계를 보면 지난 150년간 노동시간이 줄어든 해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 (좌장)박진 교수 · KDI 국제정책대학원



· (토론)이원재 대표 · LAB2050



· (토론)전병유 교수 · 한신대학교



· (토론)최현수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박원재 본부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3차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1.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이슈의 변화
2.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변화의 원인과 진단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1.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이슈의 변화



박진

좌장을 맡은 KDI 박진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3회에 걸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좌담회로서 사회 현안 해결을 주제로 전체를 마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사회 분야에 중첩되는 이슈가 많다 보니, 사회 분야에만 국한한다기 보다는 주변 분야까지도 포괄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초점을 맞출 사항은 복지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입니다. 각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 현안 분석과 함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복지, 노동, 교육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과제를 순서대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야에 접근하기 전에 전반적인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습이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사회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모습을 전병유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전병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사회는 근대화된 디지털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당히 장기

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과 생명의 문제,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 지구환경의 문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인류가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무시했거나 무시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중심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안들이 이런 새로운 현안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현안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현안들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현안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강화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노동과 자산시장에서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 노동하는 방식, 소득과 부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이 생계를 위한 소득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이 중대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으로 있을지,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노인과 취약계층 문제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법에 따라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 연령대인 18~65세의 일하는 계층도 새로운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과연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한 1차적 현안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안 논의를 해야죠. 사회보험 형태를 유지할지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할지 말아야 할지 등의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류사적 위험에 대해 모든 국가의 정부를 비롯해 중앙은행들이 전대미문의 통화를 투입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탈출, 위험에 직면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가 사회적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산집중에 대해 자산세로 대응할 건지 소비세, 부가가치세로 대응할 건지, 아니면 소득세를 누진제로 할것인지와 같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거나 하는 등의 경제적인 해법과 함께 사회가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도 중요한 사회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현안이 아직 그대로 존속하고, 오히려 그것들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부의 집중 문제는 지금까지 있던 문제지만 더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서 보편적 생계 유형이 우리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그 대응 방법으로 제도적 수단인 기본소득과 사회보험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거시적인 대응으로서 중앙은행과 중앙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원재

전병유 교수님 시각에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소득제를 아주 오래 연구한 것은 아니고 2년 정도 연구를 해서 작년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적 관심

을 받는 사안은 아니었죠.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게 올해 초인데, 한번 크게 문제가 됐다가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조건 없는 소득 지원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했던 기본소득제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시행이 돼버린 셈이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기본소득제를 알게 되었고, 그 용어가 아니더라도 조건 없는 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됩니다. 국민이 개념을 알게 됐다는 것이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런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전병유 교수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열어준 사회 모습은 일시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올 변화였습니다.

전병유 교수님께서는 일자리 고용의 변화, 소득과 부의 집중 문제 등이 비대면의 현상과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은 ‘분산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분산되는 현상이에요. 분산이 강제되는 현상, 분산이 가능해지는 현상을 포괄하고 있어요. 예컨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연결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위험하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라든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개발된 이후, 기존의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구조가 해체되고, 상당 부분 플랫폼 형태로 변화되리라는 전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기업에 관철되고 구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걸림돌이 되는 관행이나 습관, 제도와 정치적인 구도 등과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요인으로 우리를 타격했어요. 관행과 제도와 습관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로 나타나지만, 고용도 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한 군데에 모이고, 특정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등 수직적 종속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고, 이제는 아예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도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하나는 소비생활에서도 ‘분산’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교육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을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실험이에요. 교육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예측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변화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해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분산 방식으로 안착시킬 것이냐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도 살펴보지요. 병원이 바이러스가 있는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원격의료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었습니다.

기업의 구조가 바뀌면 주거도 변화합니다. 지금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고 문화시설이 형성되는 과정은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봐요. 저는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이 변화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산’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기후 위기라든지 이러한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진

감사합니다. ‘분산’을 키워드로 말씀해주셨고요, 생산에서는 고용 관계 변화로의 귀결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소비와 생활, 교육, 의료 부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인간이 가진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기본소득,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에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산을 코로나19의 결과로 본다면, 역설적으로 ‘연결’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디지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함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현수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박사님께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연구하시면서 국정 전반을 보시게 됐을 텐데,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최현수

올해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파고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때 실생활에 그것이 어떻게 다가올지, 체감하지 못했던 변화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 전반의 변화가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는 더 힘들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삶의 영향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

각했던 부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현실의 문제로 부상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가속화’가 되겠죠. 오랜 기간 이야기해 왔던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큰 정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과 해결책 등이 논의될 겁니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필요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배움, 세 번째는 여가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봄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건강도 중요하고, 주택도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하고 여러 삶의 기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4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일과 배움과 문화, 여가에 대한 것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 중에 ‘돌봄’과 관련된 영역의 경우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서비스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공에서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든지 물적 기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부문에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책임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면하기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돌봄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적 해주셨습니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많은 분이 논의해 주신 사안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노동자들이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는 소득을 평평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 대상의 재해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문제를 거론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최현수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최 박사님은 사회복지 연구를 해오셨는데 사회복지, 교육, 노동 분야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라 보시지요.



최현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존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들은 그동안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 특히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각지대 문제를 크게 나눠

보자면 사실은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가 실제 대상자를 많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보장성이 낮거나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다루는 디지털이나 ICT 관련해서 최근 10여 년 동안 쟁점이 된 것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정보화는 정보시스템구축, 데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대상자를 찾아내거나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봐요.

복지에서는 상당한 데이터와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행정 프로세스들이 접목되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형평성과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행복이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들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발전시켜왔어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제



도나 사회정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주의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ICT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복지제도에서 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별적인 고위험군 위주의 접근인지, 보편적인 정보

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인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직 ICT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사각지대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제도적으로도 발생하지만 디지털 격차에 따라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도 말씀주셨습니다.

최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예측하고, 정부가 먼저 찾아서 사회복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것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현수

앞서 말씀드린 ‘행복이음’이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근간이 된 자료가 있다면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입니다. 2010년도에 ‘행복이음’을 만들 때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 데이터를 각 기관이 잘 구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적용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

템의 문제인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난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도입해서 지원 논의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선별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었지요.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득재산이라는 정보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변화와 매출의 변화를 과연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정보는 국세청에 소득자료나 매출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원천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정책에서 서비스 행정을 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소득세나 다른 세제의 주기에 따라서 축적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지금과는 많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멀게는 2년 전 자료도 있고, 플랫폼 기반의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불안정한 근로자들 경우에는 활동은 알 수 있지만, 소득은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으로 이슈가 시작됐다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어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경험을 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재산 등 소득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불완전한 소득재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문제를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부분은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책에서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한다거나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적시에 지원하려면, 근본적인 소득이나 재산, 매출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주면 이런 부분의 발전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현안 변화의 원인과 진단



박진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범위도 문제지만 시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디지털 기술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좀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 이슈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점에서 이원재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이슈가 등장할 것 같은지요. 재난지원금으로부터 기본소득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원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다차원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관리 차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처럼 조건 없이 분배하고, 나중에 과세를 통해서 환수하는 방식이 다른 재정지출 방식보다 더 낫다는 견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5월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의 조건없는 지원금을 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형태의 기본소득 같은 현금 지급을 했는데 역시 소비 촉진을 위함이었죠. 거시경제 관리라는 새로운 논점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분배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데이터에서 나온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활동 데이터로 어디에서 부를 창출하는지 보는 거죠. 그 부를 기업과 투자자가 나누어 가지는 대신에 이익 일부를 과세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와서 이 논리가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디지

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산과 노동이 분산되어 진행된다면,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암묵지에 덜 의존하고 형식지에 더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영이 심화할 전망이고,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도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찾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대면 판매를 많이 하면 암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비대면 영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소비자의 수요를 데이터로 측정하고 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데이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오지만, 수집한 기업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환경은 더 열악해집니다. 이들 스스로가 데이터 생산자이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모든 개인의 활동 자체가 생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기본소득 분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돌봄 노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족화, 혹은 개인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불행한 점이기도 하고 보완해야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들 돌봄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오는 거죠. 학교만 그럴 것인가?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단시설이 위험하다고 인지되면 기피하게 되겠죠. 부자와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집단시설을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봄 노동이 가족화가 되는데, 이런 돌봄 노동 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자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상체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개인의 평생 소득 흐름의 예측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보험으로서 소득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처럼 소득 자체의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거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행정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할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체 일로를 겪던 가족이 다시 중요해진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함에

있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치는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미국의 사례처럼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원재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좋은 방식은 같은 액수를 모두에게 지급하고 누진적으로 과세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산 할 때 차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산정해서 징수한 다음 연말 정산에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사람의 소득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연말 정산에서 되돌리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의문이 있는 건 국세청 자료를 다 이용한다고 해도,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1년 5개월 전 자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신 자료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확정적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서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처럼 소득이 없으면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장년층이나 청년들은 그것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근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연령대는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지급해서 행정비용을 적게 잡으면서 선별성은 근사치에 가깝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진

소득과 행정비용을 고려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대치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기본소득에서 노동 근로조건의 변화가 핵심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유 교수님께 사회 보장, 또는 노동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 전망, 혹은 어떤 이슈가 떠오를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어떤 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 사회복지와 노동을 묶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유

코로나19 이전에 2018, 2019년 국제기관들이 유행처럼 미래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100주년 기념으로 보고서를 냈고 OECD, 월드뱅크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일하는 방식, 고용 방식이 변화한다는 커다란 담론과 문제 제기가 활발했습니다.

이때 AI나 빅데이터가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AI의 세 번째 겨울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고, 게다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 대한 타성, 관성이 있었지요. 실제로 AI와 빅데이터가 노동의 현실을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플랫폼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니까 실제로는 확산되는 것 같지 않다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물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서 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현장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냥 담론 차원의 문제로 치부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이런 화두가 부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노동의 미래와 관련한 담론들이 현실에 등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와 지능화가 과연 인간의 노동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총량 자체가 줄어 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대량 실업이 발생하느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임금 노동,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는 노동법, 사회적 보호 체계, 복지 체계 존속의 문제와 결부시켜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노동이 변화함에 따라 사각지대도 변화합니다. 전에는 두더지 잡듯이 사각지대 문제를 처리했지만, 노동시장 변화로 사각지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어요. 노동법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일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노동이 기계, 또는 AI로 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빠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적어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속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시군요.



박원재

최근 연구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병유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디지털 전환, 또는 AI나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AI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환경의 변화가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이 점차 형식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암묵지가 더 필요해요. 암묵지를 적용해서 디지털 서비스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더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노동을 대체한다는 우려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AI를 도입한 활용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세 번째 겨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도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



재 대표님이 복지와 맞춤형 규제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개개인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는 노력은 중요하고 기본적 체계도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관행이 그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이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시스템 통합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단일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두번째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개방 데이터

형태로 파악해서 복지부 등에 제공하고 기본소득을 준단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기술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개선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박진

박원재 본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책 초점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노동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병유 교수님의 말씀을 지원하는 증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 소득 파악에 대한 행정 부분의 저항과 정보공유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 이슈를 논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유 교수님과 박원재 본부장님께서 노동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원재

저도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단선적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이라고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있었던 현안 중 일자리 전환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

리나라만 그나마 제조업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논픽션 중에 ‘제임스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고 전환하는 과정을 약 8년에 걸쳐 관찰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이해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필요한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아주 섬세하고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적절한 투자도 일어나고 많은 분이 직업을 바꾸기 위해 재교육을 받고, 어떤 분들은 멀리 있는 공장에 재배치돼서 일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교육이 잘 맞아서 좋은 곳으로 취업했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에 실패하거나, 얻었는데도 너무 안 맞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파괴된 가정은 돌아오지 않는 문제도 나옵니다. 저는 전환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물며 자동차 공장

같은 제조업 공장들이 수십 년 동안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회적 진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변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과 전통적 처방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기술로 사회가 빨리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비대면 사회로 빨리 옮겨간다면, 그리고 비대면 사회로 정책을 계속 밀고 간다면 수많은 대면 업무들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일자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화하는 비대면 직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는 당사자들이 행복한지, 결과적으로 그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엔 전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 교육이 지금과 같은 전형적 직업교육 형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교육생에게 기능을 가르쳐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삶을 전환하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혹시 전환에 실패했을 때라도 안착하여 살 수 있는 복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소득과 함께 인권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직업교육이어서는 안되며, 거대한 프로젝트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수

교육과 관련한 최고의 이슈는 교육격차의 심화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성인의 전환 교육과 반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에요. 그동안 사교육 때문에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소비 지출 중 상당한 부분들이 교육 분야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대비나 삶의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원격 교육은 전면화 되었고, 일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학력 격차의 심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트북이 없는 일부 가정에 기기를 주기도 했지만, 단순히 인프라나 도구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학생들을 돌봐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에도 학교와 비대면 교육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학교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대면 교육과 서비스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공에서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 등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재 대표님의 전환 교육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기본소득을 좀 더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개선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사회수당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어요. 기초연금 제도는 전체 70%를 제공하지만, 역시 보편적인 제도로써 기본소득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도를 보완하면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근로 연령대에 있는 다수의 청년이나 중장년에게는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소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환기 교육과정에서 소득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산업 구조의 변화나 근무 지역의 변화로 안정적으로 해오던 일자리와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이나 제도적 선별성을 떠나 보편적인 권리로서 전환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필요한 시기에 기본소득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장년 은퇴 이후 국민연금 지급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소득이 없이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때 기본소득과 유사한 보편성을 가진 제도를 도입해서 각자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박진

최현수 박사님께서서는 전환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소득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정책 이슈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는 결국 사회안전망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교육 이슈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질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세 분의 패널들께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사회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소득 파악 등 논의해야 할 모든 정책 이슈들이 그 안에 담길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안전망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대략 어떤 말씀을 주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하신 전반적인 제도 설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저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중에서 복지나 의료 서비스 외에 현금과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소득은 위험 대비라든지 안전망 기능을 액수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넓혀준다는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에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것이 사회보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이 유연해지므로 훨씬 적합한 방식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소액이라도 GDP의 10% 혹은 5%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GDP의 10%를 국민 전체 단위로 환산하면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5%면 절반이 될 텐데요, 그 정도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욕구가 생겼을 때 큰 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큰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기본소득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현금 소득을 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도 과세함으로써 선별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전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별 융합이 특징이고 경계가 애매한 노동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연구거리이면서 또한 여러 쟁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할거냐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 기본소득이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실업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줘서 위험에 대처하게 합니다. 실업급여가 180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기능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월드뱅크도 개도국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로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아요. 이를테면 과도적 기본소득(TBI: Transitional Basic Income)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을 먼저 갖춰보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수형태의 종사자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건지, 먼저 이런 소득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넓히면 자영업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앞에서 소득 파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소득 파악 수준이 높아진 편입니다. 지난 11년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실시간 파악에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해요. 실시간 파악을 하려면 분기나 월별 신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일부에서는 세무사 비용만 조금 더 지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 정보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와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 소득 파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는 우리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나눠주면 소득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의 문제도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임금노동자들의 소득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비용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하는 기초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국민소득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기능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개념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박진

기존의 사회보험 체제는 잘 유지하고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전 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소득 파악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시네요. 바닥에 기본소득을 깔아 주는 안전망 체계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해 이원재 대표님과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체계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수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현수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은 ‘전 국민 사회보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은 근본적 원리가 가입을 임의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요. 소득 활동을 하고 자격 중심의 보험제도에서 피보험 자격이 있다면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사회보험’은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100여 일 동안 복지국가 100년 역사 속에서 다루었던 굵직굵직한 제도적 논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다루었습니다. 4월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5월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사회보험과 국세청 통합징수 등 소득 파악, 6월에는 기본소득이 7월에는 뉴딜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이슈, 그리고 8월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론에서 배우는 사회보험, 선별적 공공구조 등에 대해 지금처럼 활발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은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사회보험도 보편성 원리가 있고, 기본소득도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적 측면에서도 사회보험 재원은 노사와 정부의 부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과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자격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봐요. 자격 중심의 의미는 실제 수급 자격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보험에서는 피보험 자격 여부, 임금자 여부 등 여러 가지 자격구조를 따집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회보험은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 등 안정적 노동자로부터 역사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노동의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취업자 문제를 기존의 틀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해 노동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노동 이슈가 생긴 거죠.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로 가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절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신고만을 봅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고 그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내지만 실제로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요

즉,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고정된 자격자가 아니라 다양한 소득을 짧은 주기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비스화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전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도의 법 개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세청이 모든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 부과 징수업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역할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득 파악 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매출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투명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험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파악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과 사회보험 통합징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EITC는 제대로 안착이 되었지만,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청이 통합징수를 하도

록 하되, 최소한 월 단위는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정도의 조치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고용부가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애를 먹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나 실시간 소득 파악이 안 돼 있고, 기존의 자격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탓입니다.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두 분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변화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실질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와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소득과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부문이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최 박사님께서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건 두 분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 그리고 현금 지원 세 가지를 삼박자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 분 모두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전 국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 파악이 전 국민 사회보험의 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주기를 짧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소득 파악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아요. 독일의 경우는 5천 유로 현금 사용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정보원 신고 대상이지만 불법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정보공유와 관련된 국세청의 협조입니다. 소득 파악을 잘해서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약은 없는지 정보공유는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징수 방법입니다.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세청의 책무성이 높아져서 소득 파악이 잘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가 있어요. 신고 주기에 대한 저항 이슈, 현금 사용 불법화와 소득 파악 노력, 국세청 정보공유 이슈, 그리고 통합징수 이슈에 대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수

사실 국세청 정보공유라는 부분은 두 가지 통합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국세청에 파악된 자료만 잘 공유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국세청 사회 보험 통합징수가 무산된 이후에 10여 년 넘게 이슈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는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데이터의 주기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나 시차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데이터청’이라는 이슈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청’ 이슈에 있어서 핵심은 공공데이터라고 봅니다. 공공의 데이터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발은 국세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데이터를 연계해서 정책에 활용하거나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 근간을 만드는 게 국세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 또는 환급과 관련된 기능들이 사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만 개선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사용에 대한 납세 행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국세청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든 좀 심한 말로 강압적으로 하든,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직입니다.

사회보험 관련 공단에 기능을 부여한다고 해도 사회보험료만으로 개별 납세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는 월 단위로 하고 국세청이 부가 징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징수, 환급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말씀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너무 잘 되어있어요. 누구나 홈택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소득이나 매출 파악은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실시간 소득 파악과 관련한 복지제도 개편을 2013년에 시작했어요.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개편했지만, 당시 영국은 우리의 홈택스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구입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소득과 매출 파악을 통한 복지제도 개편을 보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징수 책임을 국세청이 가지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징수기능, 연금보험공단의 징수기능이 모두 국세청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는 예전에 논의됐던 '사회보험청'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군요. 사회보험을 넘어서 다른 기능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현수

'사회보험청' 개념은 공단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져야 하는 개념일 수 있고요. 사회보험만 놓고 보면 자격, 부과, 징수, 급여,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실제 부과 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이 하고,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집중하면 됩니다.

최근 공단의 역할이나 사업들을 보면 단순히 사회 급여를 제공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공단의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관리 예방이나 장기요양, 서민 케어 등 서비스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징수인력이 급여나 서비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단들이 가진 징수업무가 전환돼도 인력을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알겠습니다. 징수기능만 국세청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고 기관을 통합한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국민 사회보험을 위한 소득 파악 강화의 필요성, 두 번째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소득 파악과 통합 징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병유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개인 소득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이미 파악된 소득은 있었지만 정말 취약하고 숨어있고, 드러내기 싫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소득을 정의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전 국민의 소득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데 모두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쟁점은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시킬 것이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과 임금소득자의 소득을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소득 연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소셜 엔지니어링입니다. 소득 파악이 기본이기 때문에 국민이 소득 파악 기준에 동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 빅데이터 구조를 보면 먼저 국세청이 있고,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금융 기관들이 있어요. 이들 기관이 국내 소득이나 금융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은 세금 징수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에 지장을 주는 사업은 모두 꺼립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다시 작업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의 기능이나 정체성을 법적으로 큰 차원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세청이 지금처럼 징수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파악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원재

최근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파악 이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알려주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확해야 정부는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소득을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와 기본소득제를 연결해서 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소득자라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만들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개세주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소득세 1%를 적용하면 월 30만 원 기본소득에 29.7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신고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소득인지는 다음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모든 국민이 소득신고를 하고 납세하는 데까지 일단 가보도록 설계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월 단위 기본소득에 대해 월 단위 신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파락이 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급자 입장인 국가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 파락을 위해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해서 벌어지는 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고를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세청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장이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국세 징수자를 공개해요.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도 사고방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현수박사님이 말씀하신 통합징수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소득을 파락하는 데에서 자영업자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이에요. 자영업자 상당수는 플랫폼 노동자와 비슷합니다. 사업자인데 물리적 사업장은 없는 형태이죠.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연 이분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사업자로 볼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노동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노동자가 되는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영업자의 비용 정산이나 근로자의 비용 공제를 차츰 맞추고 통합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

보통 개혁할 때 서로 영향을 상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하지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국민개세주의를 정착시키자는 전략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다들 공감을 해주셨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로에서 100% 원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번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원재

제 의견은 2~3년 동안 실험기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별로 이루어진 청년 기본소득 등과 같은 제도들을 일종의 실험으로 보고, 기본소득의 최소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소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가세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1~2년이 지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 정책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비록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 효과를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회 보장제도와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병유

저 역시 기본소득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보여주는 성과를 실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수

정책실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본소득 실험을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소득에 앞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에 근로 연령대 입장에서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연금대상자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제도가 완성되어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의 취업 전이나 중장년 퇴직 전환기 시점에 기본소득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3~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처럼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제 실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디지털뉴딜로 데이터댐을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의 품질과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디지털 뉴딜에서 ICT 인프라나 인공지능 인프라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과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ICT 인프라가 구축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무엇이든 인공지능이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가 않아요.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와 불완전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로의 접목은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융합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와 정책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가 협업하기를 제안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축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해석해서 정책과 서비스에 접목시킬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위원회나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정책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과 자원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책이나 서비스 발전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전환기 설계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 보장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노동의 전환기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전환이라는 이슈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예측이 가능

하다면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에서 좀 더 자유로운 반 정도의 기업가, 반 정도의 노동자와 같은 상태로 혁신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병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은 늘 공존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책도 만들어졌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공공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점차 논문 내기도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과학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틀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오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기저에 기본소득이 있고, 그 위에 전 국민 사회보험을 얹힌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제를 대규모로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 몇 년 만이라도 일부 계층에 대한 우선 적용 등 실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국민 사회보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중요하고 개인 노동자와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해주

셨습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징수 통합 등 국세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 정책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이 좌담회의 결과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좌담회 참석자

1 차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방향

2 차 좌담회 -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비즈니스 혁신

3 차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사회 현안과 해결방안

1차
좌담회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전) 아프리카 TV대표
- 전) 나우콤 대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전) LX공간정보연구원 원장
-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우천식 (KDI 글로벌경제실 실장)

- 전)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자문관
- 전) Clemson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

- 전) 대통령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전) WEF 글로벌 어젠다 협의회 위원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소장)

- 전) 방송통신위원회 결함판매 인가 심사위원회 위원장
-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차
좌담회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 전) KBS '박희준의 성공지도' 진행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연구위원)

- 현) 금감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단장
- 전) IMF · OECD자문위원(재경부)



박정수 (산업연구원 본부장)

- 현)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

- 전) 한국개발연구원
- 전) 맥킨지 컨설턴트



이은영 (PwC 리서치센터 이사)

- 현) PwC 리서치센터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3차
좌담회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 국회미래연구원장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분과위원장
- 현)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위원



이원재 (LAB2050 대표)

-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발 행 월 | 2020년 11월

기획·발행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발 행 인 | 문웅식

편집·제작 | 한국애드

I S B N | 978-89-8483-495-8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대구본원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 서울청사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04520)
- 제주 NIA 글로벌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63568)
- 전화 : 053)230-1114
- 팩스 : 053)230-1907
- 홈페이지 : www.nia.or.kr

Printed in Korea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